

전남 시장·군수 인허가 재량권 남용 심각

관계 법령 무시 자의적 판단해 결정

행정심판 증가 ... 3분의 1 이상 패소

전남지역 시장, 군수들의 인허가 관련 재량권 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특정 다수의 주민 민원이나 추상적인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을 불허하면서 무분별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는 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보완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어 시·군의 행정심판 패소 사례도 증가 추세에 있다.

9월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초까지 사업자나 주민이 시·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198건 가운데 일부 인용과 인용은 모두 73건으로, 전체의 3분의1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식위생법 위반, 정보공개 거부처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을 제외한 건축·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그만큼 시장·군수가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P개발 대표 이모(55)씨는 최근 영암군을 상대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택지개발 성도 목적으로 지난해 영암군 미암면 일원에 토사를 채취하겠다고 영암군청 민원실에 접수한 것이 지난해 9월25일, 그 뒤 각 실과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8일 현장 조사, 이후 서류 보완, 두 달 뒤인 12월 전입로 허가 결정, 검

토보고서 제출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협의 후 처리했으나 최종결재에서 '불허'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이씨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서류를 접수했고, 이후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거액을 들여 사업을 상당부분 진척시켰고, 납품할 곳까지 정해졌는데 아무리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는 너무나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군수가 최종 단계에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암군 관계자는 "행정의 최종의 사표시는 최종 결재권자가 하는 것"이라며 "불허가 이유를 해당 업체에게도 알렸다"고 해명했다.

여주시 역시 지난해 의료시설(재활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박모(54)씨에게 소송 문제 발생, 입지 부적합, 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여주시)의 불허가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58조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시장·군수 등이 자신의 당선을 도운 측근 인사를 배려하거나 다음 선거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사업·개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과 민간 기업 피해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청구인의 인용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대부분 인허가 신청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체장에게 재량권이 많이 부여돼 있는데다 단검한 사안은 무조건 법에 맡긴다는 의식이 강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종시서 또 구제역

농장주 강원 등 돼지분양... 예방적 살처분

설 연휴 앞두고 전국 확산 우려 비상

구제역 방역을 지휘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앞마당' 세종시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전국 확산 우려까지 제기돼 방역이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주가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들을 강원도 철원, 경남 양산,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등 4개 농장에 분양한 것으로 밝혀져 발병 범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철원소재 농장에서는 이미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1600여마리를 키우는 세종시 연서면 소재 농가에서 지난 8일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의심신고 전 돼지를 출하했다"면서 "분양받은 4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은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다른 농장과 불과 50m 떨어져 있어 8일부터 이동제한대상이었으며 실제 구제역 의심 돼지가 나타났으나 신고 전 포천·남양주·양산·철원에 각각 300마리·120마리·160마리·260마리씩을 출하한 것이다.

강원도와 경남은 지난해 12월 이후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철원은 강원도내 돼지의 40%인 14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제한 명령 위반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강원도 철원군은 이동제한조치 위반 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황주홍 '구제역·AI 국경 검역 구멍'

작년 가축전염병 발생국 다녀온 367명 미신고



지난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다녀온 축산 관계자 367명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는 등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국경 검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관계자는 7만3614명이다. 이 가운데 367명이 신고를 하지 않아 하루에 한 명은 질병 발생국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입국자는 2013년(5만9046명) 보다 1.2배 늘어났다. 그러나 미신고자는 2013년(59명)보다 522%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농림부가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거주지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지만 입국 당시의 검역 조치 대상에서는 빠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발판 소독조를 밟고 나오는 것 외에 별다른 소독조치를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입국자 자신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검역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면서 "작년에만 돼지 2만마리, 닭·오리 1500만 마리를 살처분 해야 했던 농가의 시름을 헤아려 입국 신고와 명단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서구 을 보선 정승 영입 공들이기



새누리당이 4·29 보궐선거에서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 정승(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영입하기 위해 공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진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김군진 당 중앙위 행정자치분과위원, 조준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치분과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한 광주 서구를 선거구에 정승 처장의 영입 여부를 놓고 추가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영입 대상이(출마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라며 "(정 처장이) 공직자고 하니 주변 정리도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성공 개최 힘 모으십시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9일 오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뿌리산업' 활성화 ... 광주경제 살린다

광주시가 자동차, 광산업 등의 성장판 역할을 할 주조, 용접,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9일 "오는 2018년까지 뿌리기업 규모를 700개 이상, 생산액은 14조원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집적화 단지 조성 및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시 주력산업인 자동차, 정보기전, 광산업 등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뿌리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월 제정·공포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13년 기준 557개인 뿌리산업 기업을 2018년까지 712개로 늘리고, 총 생산액도 11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지역본부 내에 총사업비 100억원(장비구축 80억원·센터건립 20억원)을 투입해 용접·접합 R&D지원센터를 오는 10월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용접·접합 R&D 지원센터는 개관과 동시에 기술, 교육, 시험생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김치문화축제' 산업형 축제로 거듭난다

'일회성 행사'라는 지적과 함께 논쟁에 휩싸였던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산업형 축제로 다시 태어난다.

광주시는 9일 "광주김치 전국화와 김치축제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 산업, 축제, 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그동안 김치축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축제 명칭, 개최 시기, 장소, 방식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축제명칭을 광주김치축제 또는 광주김치산업(전)축제로 바꾸고, 개최시기도 10월에서 배추 출하시기인 11월로

옮길 계획이다. 개최 장소는 기존 북구 중외공원에서 남구 김치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또한 광주김치 전국화 방안, 김치타운 활성화 대책,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 등 김치산업 관련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김치축제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 계획이다. 시는 김치축제 예산도 기존 15억여원에서 10억원 안팎으로 줄이는 대신 연예인 초청 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억 한정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	------------------------------	-----------------------------	---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	--	--